

보도시점: 2024. 11. 20.(수) 08:30

배포: 2024. 11. 20.(수) 08:30

‘민원 데이터-공간·지리정보의 융합’... 지역 현안 분석 모델 제시

- 2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민권익위-국토연구원’ 협업 과제 결과 발표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시너지 창출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¹⁾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1)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내 지역별 민원 현황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 붙임 참조)

- 국민권익위는 현재 1,200여 개에 이르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구축한 민원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로 축적되며, 그 규모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400만 여건 달한다.

민원분석 전담부서에서는 축적된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의 실무 경험과 국토연구원의 연구 전문성을 결합한 여러 사업을 시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석기법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옥선애 (044-200-7283)

< 불임 >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연구결과 시범분석 사례

사례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가칭) (불법주정차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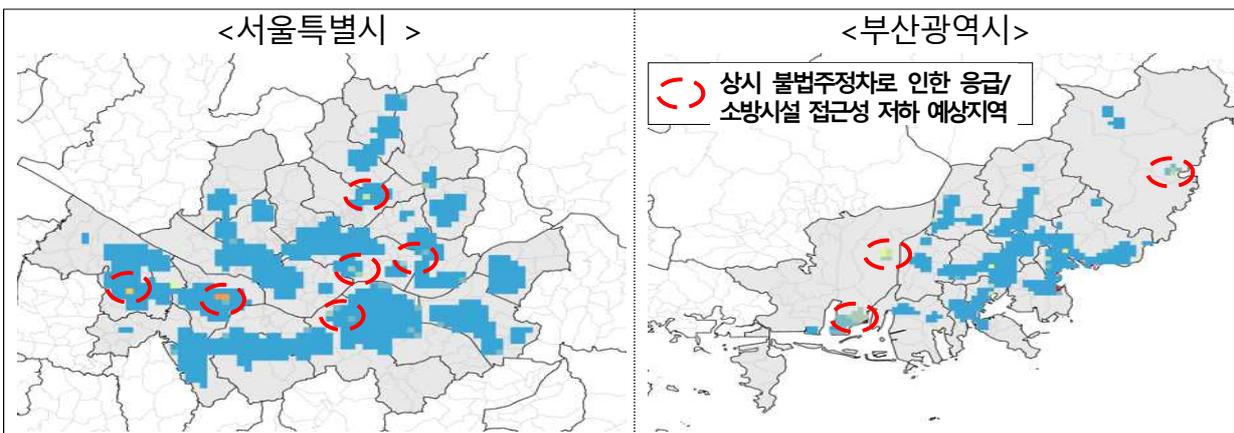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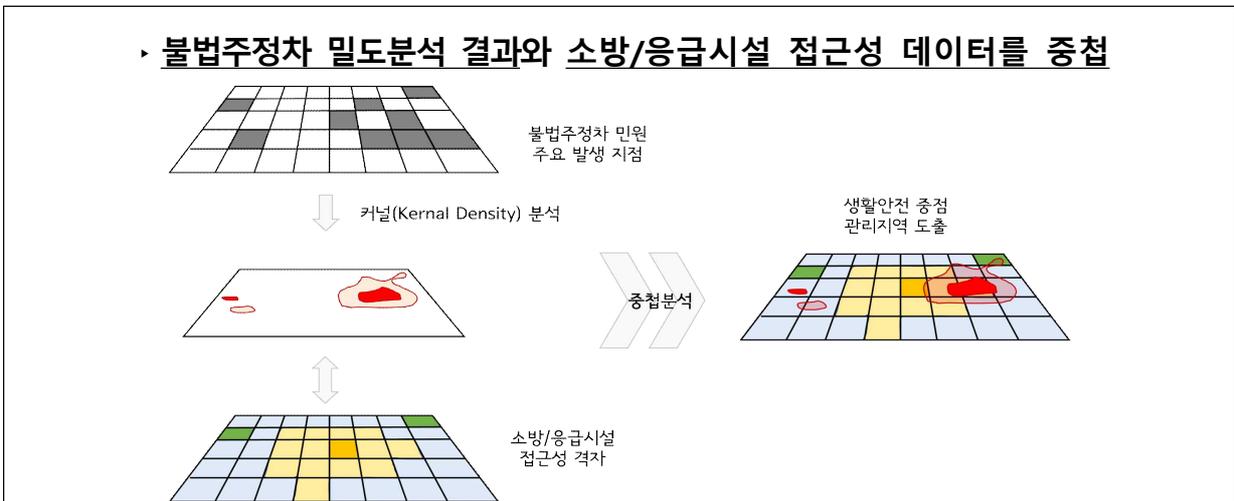
■ **(추진배경)** 민원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주차' 민원 분석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소방차량 및 응급 이송 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 방해로 화재 대응력 저하로 사회위험 야기
- *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17.2월, 29명 사망 및 29명 부상)

■ **(데이터 융·복합)**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 지점 500m 격자 단위 데이터와 「국토정보플랫폼」의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를 융·복합

- * 불법주정차 밀도가 가장 높게 확인된 서울과 부산 시범 분석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 발굴 개념도>



* 응급차량 접근성은 푸른색 > 노란색 > 붉은색 순임

👁️ **(시사점)** '우리 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 집중 단속 및 관리방안 제도화 필요

-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저하 위험 지역은 우선적으로 초기 진압용 소방용품, 응급상황 대응 용품 상시 비치 등 관리체계 구축